

‘위험한 현장, 로봇 먼저’...현대차, 소방관 안전 지킨다

소방청에 무인소방로봇 기증...고위험 화재 원격 진압 현장에 선투입 수색 수행...방수·분무·카메라 등 갖춰 정의선 “사람 살리는 기술...안전 지키는 든든한 팀원”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무인소방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원격 화재 진압 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기증했다. 소방관 진압이 어려운 고위험 화재 현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초동 진압과 수색을 수행하고 인명 구조 과정에서 위험 노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무인소방로봇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은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 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봇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세트로파’에 다양한 화재 진압 장비를 탑재해 제작됐다. 방수포, 자체 분무 시스템,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을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에도 소방관을 대신해

원격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HR-세트로파는 원격 주행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임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현재 방산 부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무인소방로봇의 장비 전면부에 탑재된 방수포는 화재 진압의 핵심 요소로, 직사 및 방사 형태로 방수 제어가 가능한 노즐이 적용돼 다양한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자체 분무 시스템은 장비를 둘러싸고 있는 분무 노즐로 미세 물 입자를 지속 분사해 장비 외부에 수막을 형성하고 화염 및 고열로부터 장비 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무인소방로봇은 섭씨 500~80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서도 장비 온도를 섭씨 50~60도로 낮춰 화재 현장 근처 거리에서도 원활한 소방 작업이 가능하다.

전면부 상단에 탑재된 시야 개선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불길과 짙은 연기 속에서도 우수한 대상체 검출 성능을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무인소방로봇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특수구조대 장비 소개를 듣고 있다.

확보해 발화 지점이나 구조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격 제어기는 무인소방로봇과 무선 통신으로 연결돼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장비 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화

재 현장 상황과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원격 주행, 소방 운용 등을 제어한다.

이밖에도 무인소방로봇은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타이어가 장착됐으며, 6륜 독립구동이 가능한 인휠모터 시스템이

탑재돼 화재 진하나 장애물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원활한 원격 주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이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 화재나

구조물 붕괴 우려가 있는 화재 현장에서 초동 진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소방로봇이 전동화 장비인 만큼 내연 기관 소방 차량과 달리 신소가 부족하고 밀폐된 지하 화재 현장에도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이 무언가 지를 일깨워 준다”며 “소방관 여러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소방청과 무인소방로봇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증하는 무인소방로봇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라며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아 조지아 공장,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

기아 조지아 법인은 24일(현지시간) 누적 생산 500만대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지아공장은 지난 2009년 중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구축된 기아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이다.

누적 생산 500만번째 기념 차량은 올 뉴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조지아주에서 생산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기념 행사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부 관계자, 커뮤니티 리더, 임직원들이 참석해 기아 조지아의 성과를 축하했다.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텔루라이드는 북미 소비자 수요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차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이다.

1세대 텔루라이드는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 등 주요 상을 석권하며 북미 시장



기아 조지아가 2027년형 기아 텔루라이드 HEV 출시와 공장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을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 밴스 스미스 조지아주 하원의원, 그레고 도지어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 총괄, 크리스 넌 조지아주 지역사회부 장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스투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법인장, 브라이언 P. 켐프 조지아 주지사, 마티 켐프 조지아 주지사 영부인,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장 및 기아 미국법인장 사장, 존 롤 현대차그룹 미국기술연구소 사장, 크리스 클락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 드류 퍼거슨 현대차그룹 워싱턴사무소장.

에서 브랜드 위상을 크게 높였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및 미국 판매법인장 사장은 “기아 조지아는 텔루라이드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의 공장으로서, 이번 생산 개시는 단순한 신차 출고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며 “500만

대 생산 달성도 조지아주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통해 기아의 기술적 진전과 미래 전략 방향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텔루라이드는 2019년 출시 이후 조지아에서

‘올 뉴 텔루라이드’로 첫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시작 세번째 글로벌 생산 거점...“임직원 헌신·팀워크 결과”

대 생산되며 기아 라인업 내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사회, 그리고 주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스투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생산법

인은 “500만대 생산은 임직원의 헌신과 팀워크의 결과”라며 “내연기관,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하게 된 기아의 유연성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자본시장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위, 포상금 한도 폐지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페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1000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연합뉴스

‘바가지 뿌리 뽑는다’...정부, 구조적 차단 나섰다

세무조사·은누리상품권 가맹 취소·정부지원 배제 등 강력 제재 지자체 등 합동점검반 운영...‘착한가격업소’ 우수지자체 지원도

바가지요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통시장 점포와 숙박업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세무조사 검토를 비롯해 은누리상품권 가맹 취소·정부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 연동을 통해 바가지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시 숙박,

교통, 음식점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지역은 물론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민·관 공동참

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다.

먼저, 정부는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 은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또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은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바가지요금 이 적발된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시장 행사 중단, 3회는 시장 전체가 다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시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도 마련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정부가 추진하는 숙박 할인행사 참여가 제한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에 그치던 것 기존 제재를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의 순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제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 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근절 대책과 함께 불가리 우수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을 통한 바가지 근절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책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행위 등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며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바가지요금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국민과 업계에 신속히 알리고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